

정몽구 회장 조카들, 최저임금 빼앗는 강도질 저질러

현대그린푸드, 상여금 월할 지급 끔수·노조탄압 ... “문재인 대통령이 시켰다. 정부 원망해라”

공장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밥을 생 산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최저 임금 도둑질에 맞서 투쟁에 나섰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비롯해 전국에서 3,000여 개 영업장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는 노동자들에게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일 지급하기로 일방 통보하고 시행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뻔한 꼼수다.

금속노조 사업장인 기아차 화성공장과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무력화에 맞서 월할 지급 상여금을 현금으로 찾아 사측에 반납했다.

기아차 화성공장과 현대차 전주, 남양원 구소 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 여성 노동자들은 2월 17일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 앞에서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무력화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를 열었다.

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지회들은 ▲최저 임금 도둑질 중단과 지급 ▲상여금 일방 지급변경 철회 ▲노조탄압 중단과 노동 3 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1월부터 상여금 월 할 지급을 일방 시행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매일 지급하는 상여금의 75%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점을 악용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사실상 ‘강 탈’ 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것이다. 정부를 원망해라”, “2024년까지 임금은 동결이다” 라는 막말 을 해댔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서러운데, 자본 은 이제 최저임금마저 빼앗아가려 한다” 라며 “금속노조는 자본의 최저임금 끔수 삭감을 투쟁으로 돌파하겠다” 라고 지지와 연대를 약속했다.

김영아 노조 전북지부 현대그린푸드 전 주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우리 임금이 피 자 조각도 아닌데 왜 조각 내서 주느냐” 라며 분노했다. 김영아 지회장은 “최저임 금 인상 끔수는 아흔아홉 섬을 가진 회사 가 노동자가 가진 한 섬마저 빼앗아 일백 섬을 채우겠다는 속셈이다. 우리는 한 섬 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결의를 높였다.

정영에 노조 경기지부 현대그린푸드 남 양지회장은 “우리는 현대·기아차 밥심의 원천이고, 소중하고 귀한 일을 하는 노동 자” 라며 “식당 노동자들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현대그린

푸드의 후진 생각을 반드시 바꾸겠 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그린푸드는 최저임금 삭감뿐 아 니라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쏟아진 증언 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끓는 물이 조 리원의 장화 속으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를 당한 조리원은 가

까운 병원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회사 지 정병원으로 이송됐다. 조리원은 이송과정 에서 적절한 조치조차 받지 못했다.

그동안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도 산재 승 인을 거부하던 현대그린푸드는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해줬다. 화상이 심해 피부 이 식수술까지 받은 조리원은 치료가 덜 끝나 산재 연장을 요청했다. 사측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산재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 화상을 입은 조리원은 지금 개인 연 차를 써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무더위 속에 일하다 쓰 러진 조합원이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산재를 신청하자 2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1년 계약을 맺으며 “다시 쓰러지면 그만 둔다” 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대그린푸드 공동대표 정지선과 최대주 주 정교선은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조카 다. 지난해 이들은 주식배당금으로 최소 61 억 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번 상여금 월할지급으로 매달 13억 7,100만 원, 연 164억 원에 달하는 최 저임금 인상분을 도둑질하고 있다.

노조 중앙위, 2019년 사업계획·투쟁방침안 등 승인

14일, 127차 중앙위 열어 ... 경북권 지부 통합 추진 중단 관련 안건 정대에 올리기로

금속노조가 2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27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0기 1년 차 사업평가안과 2년 차 사업계획·2019년 투쟁방침안을 승인했다. 중앙위원들은 10기 2년 차 사업 예산안도 승인했다. 10기 2년 차 관련 안건들은 25일 여는 4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룬다.

중앙위원들은 47차 정기대의원대회 소집과 안건을 승인하고 노조 규약 부칙 14조 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경과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10기 1년 차 사업 총괄평가에서 “금속노조는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와 산별교섭 제도화, 노동법 전면 개정을 걸고 세 차례 총파업을 벌이며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반노동자성 정책에 대해 싸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강력한 세력임을 보여줬다” 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산별노조 발전 전략위원회 사업을 통해 10기 2년 차에 금속노조 발전전략 방침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확보했다” 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2년 차 사업계획으로 ▲산업변화 대응 전략 ▲사회적 투쟁 전략 ▲조직확대 강화 전략 ▲산별교섭 전략 등 4대 전략을 제출했다.

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투쟁 기조로 ▲임금동결, 복지축소와 임금체계 개악 저지, 생활임금 쟁취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에 집중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 및 노사공동

위 불참사에 대한 조직적 대응 강화 ▲2018년 확보한 노사공동 위원회와 강화된 단체협약위원회를 통해 2020년 이후 산별교섭 발전을 위한 내실을 기함 등을 내걸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올해 산별교섭 방침과 관련해 “중앙집행위원회 토론을 통해 세부 방침을 마련해 제출하겠다” 라고 밝혔다.

노조는 경북지부 통합에 관해서 통합논의를 시작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의미가 퇴색했다고 판단했다. 지금 경주지부와 구미지부, 포항지부 조합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세 개 지부 통합은 해당 지역지부의 특화 미조직 사업을 통한 조직확대 전략에 어긋난다고 봤다.

중앙위원들은 경북권 지부 통합을 규정한 노조 규약 부칙 14조 삭제를 오는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해 최종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38명 모두 정규직 노동자”

인천지법,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서 정규직 인정 ... “법 어기는 카허 카쎌 사장 처벌해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는 2월 14일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두루 살펴본 결과 도급 관계라 볼 수 없고, 파견 관계라는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 라고 판단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38명의 노동자가 전원 한국지엠

정규직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승소자 가운데 15명은 지난해 1월 해고자들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은 대법원이 이미 판결한 사항이다. 대법원은 2013년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창원공장 노동자 5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2016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세 번의 대법원판결이 있었지만,

이번 재판은 제기한 지 4년만인 2019년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지회가 3차 소송을 낸 105명의 노동자의 재판은 아직도 판결하지 않고, 창원지방법원에 묶여있다.

지회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법이 철퇴를 가해야 한다” 라고 덧붙이며 불법파견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카허 카쎌 한국지엠 사장과 관계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